



간첩 누명 유우성 씨 무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2, 3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시도 중단하라

16면

우크라이나
전쟁

4, 6면

진보교육감 시대 12년의
성적표

8~9면



식량 위기로 세계 곳곳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11면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확전에 일조하는 행위다

관련 기사 5면

간첩 누명 유우성 씨 무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국정원은 탈북민들을 ‘간첩 조작 어장’ 취급합니다”

유우성 씨를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 낸 '민주 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변호인단 중 한 명이었던 장경욱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국가보안법과 억압 문제를 직시해야만 현재 상황에 관한 근본적 인식과 해결에 다가설 수 있다고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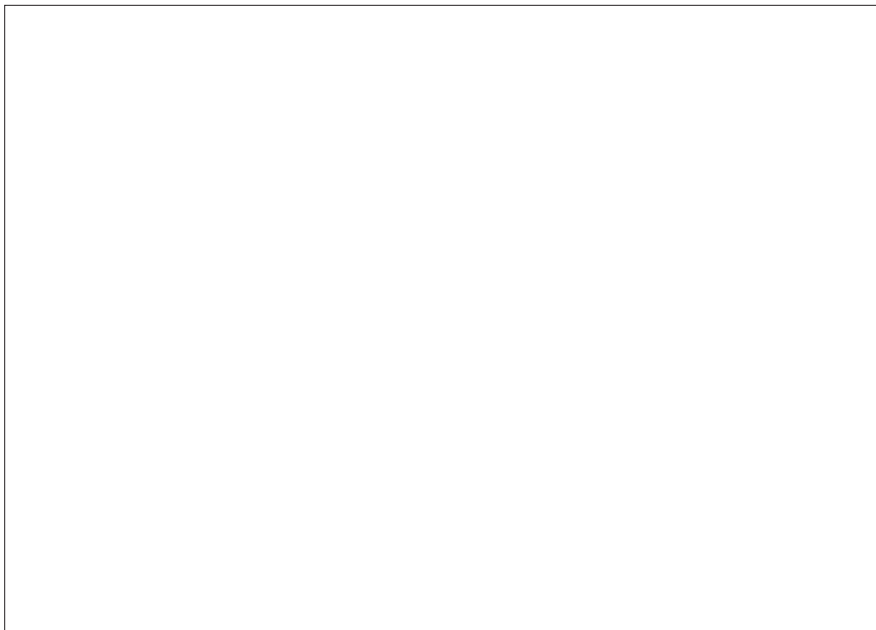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이시원이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윤석열 정부에 금의환향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 근본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자유가 없는 파시즘 체제에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첩 조작은 너무 쉬웠던 거예요.

독재 정권 때 몽둥이로 때리고 했던 것만큼이나, 탈북민들을 독방에 가둬서 '사육 수사'를 하는 것도 고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인권 단체들조차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간첩을 조작해도 이의 제기할 사람도 없고 싸울 사람도 없으니, 국정원은 분단 이래 꾸준히 조작을 해 왔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간첩 조작이 있었고요. 지금도 '암호명 국화' 사건*이나 [탈북민] 김련희 씨*가 겪는 문제에 대해 사람들은 이의 제기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발 방지 대책이나 이시원 같은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처벌 등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이하 합신센터)에서 목매서 자살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수사 한 번 못 하고 [경기도] 시흥 쪽에 무연고 매장 처리해 버렸어요. [만약 국정원 주장대로 간첩으로 자백을 했다면, 북한에 알려 주고 유골을 돌려 줘야 정상인데 말이예요. 그런데 영화 <자백>에서 <뉴스타파> 최승호 피디님이 [이 의혹을 다루면서, 북한에 있는] 그분의 딸하고 통화한 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아



장 변호사는 20년 이상 간첩 조작·국가보안법 사건 피해자들을 변호하며 국가 폭력에 맞서 왔다

니냐를 저한테 자문하면서 겁내는 게 우리 사회 현실이에요.

[남한 정부는] 수많은 간첩 조작을 해 놓고도, 과거사위원회 같은 것을 하면서도 북측에 사과 한 번 한 적이 있나요?

한국 사회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갇혀 있는데도 사람들은 '민주화됐다', '인권 선진국이다' 하는 착시 현상을 보고 있어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 벌어진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유우성 씨가 어머니 장례로 북한에 다녀왔다고 국정원에 얘기한 사람들이 탈북민이에요. 그 첩보가 입수된 건 유우성 사건이 터지기 오래전이었어요. 국정원은 그 탈북민들한테 돈을 주면서 우성이가 한 번 왔냐, 여러 번 왔냐 물어 가면서 녹음을 하는데 가짜 증언이 막 생겨요.

밀입북 건으로 국정원과 보안 경찰이 유우성 씨를 합동 수사했는데, 국정원은 수사를 보류하고 경찰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만 슬쩍 처리해서 검찰에 송치했어요. 그게 무혐의로 일단락이 되니까 유우성 씨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

로 인정받았다' 하고 좋아했었죠.

국정원은 유우성 씨가 재북 화교인 줄 다 알았죠. 유우성 씨한테 찾아가서 정보도 달라고 하면서 이용했어요. 그래서 유우성 씨도 국정원 대북 정보 담당 직원과 '형님, 아우' 하면서 지냈고 동생을 데려오겠다고 상담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국정원이 유가려 씨가 한국에 들어오니깐 허위 자백을 받아서 사건을 꾸뻤던 거예요.

유우성 씨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지만, 톱 쳤는데 밑동이 흔들거리더라고요. 큰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검찰과 국정원이] 공문서 위조도 했던 것이고요.

국정원이 유우성 사건 이후로 구금 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금 자체가 인권 침해이고, 간첩 조작 같은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가령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여러 차별 문제가 있었지만 그분들을 어디 가둬 놓지는 않았잖아요? 이주노동자들이 화성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돼 있다고 하면 이주 단체에서 찾아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탈북민은 어떤가요? 국정원은 합신센터를 탈북민 보호 시설이라고 해요. 북의 정찰총국의 테러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런 명분으로 담벽도 높고 가시 철조망도 쳐 놓고요. 그래 놓고 그 안에서 독방에서 수사하고 가혹 행위 하고, 그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사법 시스템도 통하지 않아요. 행정조사 명목으로 간첩 수사하는 일이 가능한 거죠.

탈북민 문제는 방치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도 합신센터 [개선은] 이 정도 했으면 됐다는 식이었어요. [역대 정부들은] 계속 합신센터 구금 기간만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80일에서 90일로 낮췄다가, 원정화 사건*이 터지니까 180일로 늘렸다가 지금은 또 줄이는 식으로요. 합신센터도 옛날보다는 좋아졌다는 게 '이름 바꿨다', '옛날에는 독방에 출입을 마음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안에서 출입카드로 열게 해 줬다', '달력을 안 줬었는데 달력을 줬다' 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탈북 간첩 사건은 100퍼센트 조작이라고 봅니다. 유우성 사건 이전부터 그렇게 주장해 왔어요. 북의 보위부가 한국 국정원하고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국경 지대 중범죄들을 다스리는 북쪽 경찰이에요. 거기 시골에는 보위지도원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동네 이장이 공작원을 교육해서 파견하나요? 그건 우리나라 파출소에서 간첩 파견했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국정원 직원들도 [보위부랑] 접촉했다고 다 정보원이면 탈북민들 중에 정보원 아닌 사람들 어디 있냐고 인정합니다. 그런 정보원을 국정원은 다 간첩으로 조작해 버리는 거죠. 전화 한 통화나 송금이 다 공작의 빌미가 됩니다. '간첩 조작 어장'인 거죠.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해를 끼칠 수 있는 게 뭘까요? 국정원 직원의 인적 사항? 이름도 안 알려 주는데 어떻게 아나요? 아니면 신변보호경찰의 핸드폰 번호나 이름?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죠. 지독하게 감시당하고 관리당하는 탈북민들을 간첩으로 모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해요. 탈북 간첩 사건을 맡은 국선 변호인들도 법정에서 허위 자백을 검증하기는커녕, '북의 독재 체제에 간혀서 강요된 행위로 공작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요.

유우성 사건으로 얻은 제일 큰 성과가 "조작"이라는 말을 일반 대중에게 마음껏 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간첩 사건들에] 증거 조작과 고문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 인권 단체들이나 제 동료들은 '인권 선진국에 고문이 어디 있냐'고 했어요. '그렇게

▶ 3면으로 이어짐

용어설명

‘암호명 국화’ 사건

지난해 발표된 탈북 여성 간첩 사건. 허위 자백 정황이 여럿 드러났음에도 유죄 판결이 났다.

탈북민 김련희 씨

김련희 씨는 고향(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정부는 그녀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으로 수사하면서 돌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원정화 사건

이명박 정부 때(2008년) 발표된 여간첩 사건. 위장 탈북해 군 장교 등과 교제하며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대서특필됐지만, 이내 거짓 진술과 조작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다.

민주당 지지 하락 책임을 박지현에게 돌리지 말라

5월 24일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반성·사과하는 단독 기자회견을 연 뒤, 민주당 내 갈등이 분출했다.

박지현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졌는데도 내로남불도 여전하고, 성폭력 사건도 반복되고,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팬덤 정치도 심각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당 쇄신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전해철을 포함한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별 때같이 달려들어 박지현을 비난했다.

박지현 사퇴 압력의 진원지가 그저 소수 '개딸'(개혁을 바라는 딸)이 아니라 민주당 핵심부임이 밝히 드러났다.

대선 패배 뒤 민주당은 상징적인 당 쇄신 제스처로 박지현에게 공동비대위원장직을 맡겼다. 하지만 윤호중 등 실세들은 박지현을 마스코트 정도로만 활용하려 했지, 그의 쇄신 제안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지현은 단독 기자회견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최강욱 의원 징계와 평등법 제정, 검찰개혁 입법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을 비롯해, 공식적인 회의에서 제가 제기한 사안들이 매번 묻혔다."

임시 봉합

윤호중과 박지현의 갈등은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임시 봉합됐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민주당의 실세인 보수적 의원들은 박지현을 속죄양 삼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진다면 그것은 박지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배신의 5년과 거기에 협조한 민주당 탓이다. 민주당의 인기 없음은 그 당의 배신에 대한 환멸이 여전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우파 재부상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개혁 염원 대중은 민주당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윤호중 등 실세들은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당의 마스코트로만 남기를 원한다

"미워도 다시 한 번" 투표를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반성도, 개혁적 비전이나 그에 걸맞은 후보도 내세우지 않는 민주당에 투표할 열의가 클 까닭이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 핵심 인사들은 배신을 남 탓으로 돌리기에 바쁘다. 그로 말미암은 선거 부진을 고작 2개월간 비대위원장을 맡은 박지현 탓으로 돌리려 한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운 좋게 참패를 면해도 박지현이 마스코트가 아니라 쇄신의 주체가 되려 하는 한 민주당 내에서 계속 공격받을 것이다.

선거만 끝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버르는 민주당 인사들이 많다. 그들은 박지현이 개혁 염원층의 불신을 사 온 민주당의 주요 인물들을 비판하고 이들의 '아름다운 퇴장'을 요구한 것에 격분해 있다.

박지현에 대한 공격은 8월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벌어지는 당권 투쟁의 일

환이기도 하다. 박지현 사퇴 압력을 가하는 세력들은 그를 영입한 이재명의 당내 입지도 흔들려고 한다.

그런데 이재명은 민주당 주류의 눈치를 보느라 확실하게 박지현을 편들지 않고 있다. 이런 어중간함으로 오히려 이재명의 존재감이 덜해졌다. 이는 향후 당내 투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속죄양

지난 주말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거친 뒤 윤호중은 박지현의 당 쇄신안을 지지한다며 민주당의 변화를 다시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박지현이 민주당 실세들에 반기를 들다가 내쫓길 위기에 놓인 것은 민주당의 계급적 본성에서 비롯한다. 민주당은 자본가 계급과 특권층에 핵심 기반을 둔 공공연한 친자본주의 정당이다. 비록 개혁적·진보적 미사여구로

본질을 은폐하는 데 능숙하지만 말이다.

민주당의 핵심 기반과 진정한 성격 때문에, 선거에서 표를 얻고자 대중의 개혁 염원을 대변하는 척도 하지만 말과 행동이 늘 따로 논다. 민주당은 몇몇 개혁적 인물을 내세워 지지를 모으고 있는 기대를 저버리는 일을 수십 년째 반복해 왔다.

민주당의 성격은 대표 등 주요 직책을 누가 차지하든 바뀌지 않는다. "더 많은 '박지현'(<한겨레>)이 있어도 그렇다. 민주당을 통해 공직을 맡는 개혁적 인물들은 보수적 반대에 시달리다 길들여져 점점 온건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쫓기기 십상이었다."

사회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은 민주당 실세들이 박지현을 속죄양 삼아 마녀사냥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동시에 이번 사태의 근본에 놓인 민주당의 본질에 대해서 숙고해 봐야 한다.

개혁을 이룰 진정한 힘

철옹성 같아 보였던 박근혜 정부를 조기 퇴진하게 만든 힘은 민주당이 아니라 노동계급 중심 서민층 사람들 연인원 1700만 명이 참가한 대중 투쟁이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분출했을 때, 당시 민주당은 그 운동과 거리를 두며 박근혜와 꼼수(거국중립내각) 거래를 시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나중에서야 운동에 올라타서 운동을 탄핵이라는 합법적 절차로 돌렸다(만만치는 않았지만 결국). 그리고 집권해서 5년 내내 '촛불 정부'를 참칭했지만 막상 실질적 개혁은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금, 과거의 대중 투쟁에서 배우고 민주당이 한 일들을 진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정진희

▶ 2면에서 이어짐

나섰다가 민변 망하면 책임질 거야' 하는 이야기도 들었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관점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국가보안법 체제라는 근본 문제를 운동 진영에서는 누가 다수당이 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착각해요. 하지만 분단과 친미·반북의 체제가 그대

로인 상황에서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조국 교수가 있었던 민주법학연구소가 국가보안법 폐지로 토론하는 자리에서 '광화문에서 북한 지도자 만세 부르면 어떡하냐는 질문이 나오니까 '경범죄로 처벌하면 된다'고 했어요. '북쪽 지도자를 존경하면 안 됩니까?' 이런

인터뷰·정리 김승주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저는 '과격한 변호사'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주어진 틀 안에서만 이슈화되고, '안전하게 가야지' 하면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안이한 인식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시 현상이에요.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다고 생

각하고,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한 사람도 없다는 인식이 많죠.

총체적으로 국가보안법 아래에 놓인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는 한 계속 도돌이표 그럴 거라고 봐요. 국가보안법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들까지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정리 김승주

우크라이나 전쟁 100일 교착 상태에 빠진 전쟁

김인식

2월 24일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6월 3일이면 100일째를 맞는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전쟁이 끝날 조짐은 없다.

전쟁의 참상은 끔찍하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민간인 4031명이 사망하고 473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5월 27일 현재). 정보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사상자 수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한다.

또, 유엔난민기구(UNHCR)는 우크라이나에서 국외로 탈출한 난민이 650만 명이고, 국내 난민은 77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교전국 정부들의 전쟁 프로파간다가 난무해, 양편이 밝힌 전사자 수는 엇갈린다.

군사 면에서 보면, 현재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을 완전히 장악한 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 전체로 점령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세베로도네츠크가 주 전선이 돼 있다. 그러나 하르키우와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는 우크라이

나군이 반격에 나서고 있다.

외교 면에서 보면, 이탈리아 드라기 정부가 ‘우크라이나 평화 로드맵’을 제안했지만 관련국들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측 협상단장 블라디미르 메딘스키가 “우리는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지만, 현실에서는 전투가 줄기는커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강화되고 있다.

젤렌스키는 휴전이나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 제안을 “1938년 뮌헨 협정을 연상시킨다”며 비판했다. 뮌헨 협정은 영국·프랑스의 대(對)나치 유화책이었는데,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가 협상해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 중 독일인 인구가 많은 주데텐란트를 나치 독일에 양도했다.

젤렌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전쟁의 승리는 피로 물들어 있을 것이다. … 동부 돈바스 전선에서 매일 100여 명의 우크라이나 병사가 목숨을 잃고 있을 수 있다. … 우리는 모든 것을 돌려놓을 것이다.”

젤렌스키의 강경한 태도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 상원은 5월 19일 400억 달러(약 5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법안을 승인했다. 이미 3월에 지원을 결정한 136억 달러(약 16조 7000억 원)까지 합하면

우크라이나 정부 예산(약 474억 달러)보다 많다.

물론 이 돈의 일부는 우크라이나로 보낼 무기를 생산·공급하는 미국 무기 산업으로 갈 것이고, 미국 정보기관 운영에도 쓰일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려 한다.

미국은 이 결정을 수행하고 키예프(키이우) 주재 미국 대사관을 방어하려고 특수부대원 수십 명을 “상징적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일들은 미국·나토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대리전을 치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젤렌스키가 매일 100명의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희생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자국 군대의 사상자 없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전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서방 측 동맹에 금이 가다

〈뉴욕 타임스〉와 미국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협상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5월 19일 〈뉴욕 타임스〉편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표를 제한적이고 현실적으로 정하라고 바이든 정부에 촉구했다.

“3월에 우리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인들과 러시아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나 오래 걸리든 간에 우크라이나는 자유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 목표는 변할 수 없지만, 기어코 러시아와의 전면전에 빠져드는 것은 여전히 미국의 최고 이익이 아니다. 강화 교섭이 우크라이나에 어려운 결정을 요구할지라도 말이다.

“미국인들은 우크라이나의 고통에 충격을 받았지만, 미국은 물론이고 미국 밖 나라들에서도 대중의 전쟁 지지

는 무한정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유권자들에게는 인플레이션이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큰 문제다.”

헨리 키신저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러시아와의 새로운 전쟁이라는] 극복할 수 없는 격변과 긴장을 촉발하지 않으려면 두 달 안에 평화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키신저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베트남 용단 폭격을 지시하고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전쟁을 확대한 전범이었다.

〈뉴욕 타임스〉와 키신저는 “러시아 약화”가 “비현실적인 기대”이며, 미국이 “값비싸고 소모적인 전쟁”에 빠져들다가 자칫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 목표인 중국과의 경쟁에서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미국 지배계급 내부의 우려를 대변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서방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목표를 놓고 갈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총리 드라기,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독일 총리 솔츠가 휴전과 협상을 요구했다. 다만, 이들은 협상 조건을 우크라이나에 강요할 수 없으며, 서방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가 정한 조건이 협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세 국가의 수반들이 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유럽 자본주의가 미국보다 훨씬 더 혹독한 에너지 위기의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들이 “주화파”인 것은 아니다. 가령 독일 사민당 정부는 1000억 유로(약 133조 원) 규모의 연방군 재무장 프로그램을 결정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를 두고 독일 안팎에서 마찰이 빚어질 것이다.

미국은 미사일로 러시아의 흑해 봉쇄 해제를 압박하려 한다

러시아의 흑해 봉쇄는 식량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길을 여는 문제를 놓고 러시아·터키 등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구테흐스는 칼룸 비료 주요 공급국인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일부 완화해 주는 대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산 곡물 선적을 허용해 주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봉쇄 조치를 풀려고 한다.

미국은 러시아의 흑해 봉쇄를 풀기 위해 서방 국가들이 첨단 대함 미사일인 하푼 미사일과 해군타격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 덴마크가 제 공하기로 한 하푼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덴마크에 특별히 감사”를 표했다.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브라이언 클라크는 〈로이터 통신〉에 이렇게 말했다. “대함 미사일 12~24개 정도면 러시아 함선을 위협하기 충분하며 흑해 봉쇄를 풀라고 러시아를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WHO 사무총장: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다”

5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75차 세계보건총회(WHA)가 열렸다. 이날 개막 연설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의 70여 개 나라에서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특히 “검사율이 급락한 곳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현상”에 우려를 표했다. 통계 자체가 과소집계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만큼 바이러스의 변이를 조기에 파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브라질 등 기존에 확진자·사망자가 매우 많았던 나라들에서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는 현상은 우려스럽다.(그림1) 그보다 감염률이 낮았던 나라에서도 다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추가 사망률

더 큰 문제는 현재 이들 나라의 정부 발표가 매우 과소집계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가뜰이나 취약했던 검사·보고 체계가 정부의 방역 중단 조치로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팬데믹의 기원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미국 생물학자 롭 월러스 등은 미국 백악관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주 정부들이 사실상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얼마 전부터 동료 학자, 활동가들과 함께 ‘민중의 CDC’(People’s CDC)라는 단체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미국의 코로나 상황을 알리며 경각심을 불러넣는 일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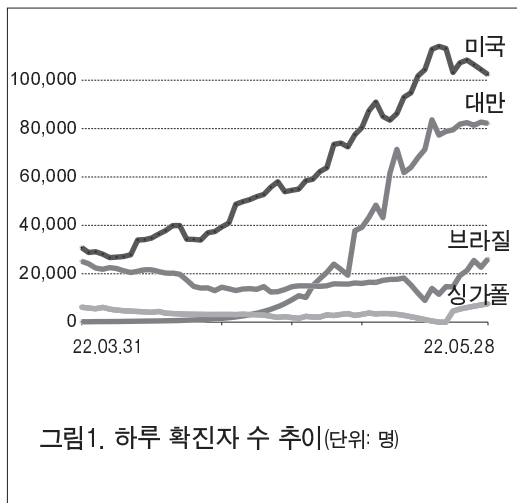


그림1. 하루 확진자 수 추이(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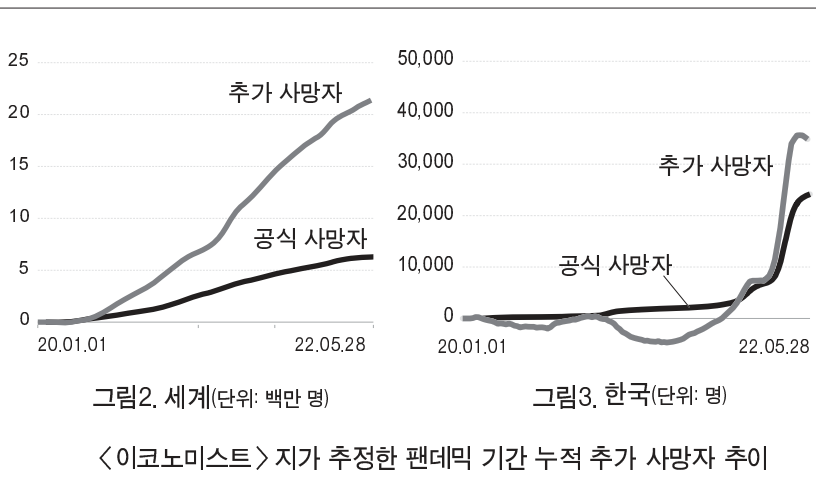


그림2. 세계(단위: 백만 명)

그림3. 한국(단위: 명)

〈이코노미스트〉지가 추정한 팬데믹 기간 누적 추가 사망자 추이

출처: Our World in Data

이런 현실을 반영해 최근 옥스퍼드 대학이 운영하는 아워월드인데이터(Our World in Data) 등은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통계 외에 추가사망률 통계를 강조해 발표하고 있다.

추가사망률은 팬데믹 이전 5년간의 주간 평균 사망자보다 팬데믹 시기의 사망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측정하는데, 이 수치는 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코로나 사망자 외에 숨겨진 사망자 규모를 대략 보여 준다. 일부 나라에서는 코로나 환자 폭증으로 의료 붕괴가 일어나 다른 질병을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들의 수도 포함되므로 팬데믹이 사망률에 끼친 영향을 더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다.

그림2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기간의 추가사망자 수는 공식 집계된 코로나19 사망자의 갑절이 넘는다. 코로나 사망자 수보다 추가사망자가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림3에서 보듯 정부가 사실상 감염 확산을 방조한 올해 추가사망자 수

가 급증했다. 〈한겨레〉는 5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서 드러난 추가사망자 수를 보도했다. “지난 3월 전국 사망자 수는 4만 4487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67.6퍼센트 늘었다. 질병관리청에서 집계하는 공식 코로나19 사망자는 지난 3월 8172명이었다. 코로나19 확진 사망자를 제외해도 예년보다 1만 명 가까이 더 많이 숨진 셈이다.”

변이

정부는 코로나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확진 후 일주일일이 지나면 확진 환자들을 코로나 중환자 분류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치료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강제로 다른 병원이나 병상으로 옮기도록 강요한 것이다. 당연히 그 뒤에 사망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사망자로 집계되지 않았다. 유가족과 환자 가족들이 정부에 항의하고 있는 이유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전체 인구 중 70퍼센트 이상이 백신을 접종한 나

라는 선진국인 57개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나타난 아프리카의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매우 낮다. WHO는 아프리카 인구 12억 명 중에 8억 명가량이 이미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올해 가을, 이르면 여름부터 재확산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계절적 요인과 백신 효과 감소, 변이 출현 등이 변수일 것이다. 이에 대비하려면 사실상 중단된 검사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 불과 두어 달 사이에 1500만 명가량이 감염된 속도를 고려하면 한국이 새로운 변이의 출현지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누구나 원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확진자가 충분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비·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 공공병상과 인력을 늘리고 의료 인력에 충분한 보상과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방역당국이 지금까지 해 온 것과 정반대로 말이다.

장호중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결정하다

한국 정부가 제3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 10만 발을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최근 캐나다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에 155mm 포탄을 대량 지원했는데, 한국군이 캐나다에 155mm 포탄을 제공해 이를 벌충해 준다는 계획이다.

언론에 보도된 세부적 계획은 다음과 같다. 한국 육군이 무기 업체 풍산에 155mm 포탄 비축분을 10만 발 제공하면, 풍산이 이를 캐나다에 정상가보

다 싸게 판매한다. 그로 인한 풍산의 손실액을 한국 정부가 벌충해 준다.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 날 풍산의 주가는 급등했다. 풍산은 박정희 정부 시절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무기 업체로, 유엔 협약으로 금지된 대량살상 무기 집속탄을 생산해 왔다. 이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투자 배제 리스트에 올라 있다. 풍산 오너 일가는 박정희와 사돈 관계이기도 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런 지원이 가

능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SBS〉는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확보를 간접적으로 돕는 ‘묘안’”이라고 보도했다.

155mm 포탄은 한국군뿐 아니라 미군 등 NATO 회원국 군대들이 보유한 주력 야포의 제식 구경 포탄이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대전차용 K4 고속유탄기관총도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뿐 아니라, 전차·장갑차

등으로도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지원들은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서방의 대(對)전차 화력 지원을 강화해주는 것이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유혈낭자한 소모전에 동참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미 한국은 1억 달러 규모의 군수물자 및 군자금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김준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먹히지 않고 있는 이유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러시아를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시키는 일련의 제재를 가했다. 프랑스 재무장관 브뤼노 르메르는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적·금융적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으스스했다. 러시아가 미사일을 꺼내들고 위협하자 재빨리 말을 주워 담았지만 말이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외환 시장에서 러시아 화폐 루블화의 가치는 석 달 새 치솟았다. 루블화 가치는 3월 초에 달러당 150루블까지 떨어졌지만 지난주에는 달러당 51루블로까지 올랐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루블화가 “올해 세계에서 달러 대비 가장 강세인 화폐”가 됐다고 보도했다. “총력전”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왜일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제재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대응이다. 러시아 정부는 자금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엄격한 자본 통제를 단행하고 금리를 20퍼센트로 인상했다. 한편, 러시아의 수입은 격감했다. 어느 정도는 제재 때문이고, 어느 정도는 루블화 가치 급락으로 수입품이 매우 비싸졌기 때문이다.

수입 감소와 에너지 가격 상승 덕에 러시아는 2022년 1사분기에 580억 달러에 이르는 기록적인 국제수지 흑자를 냈다. 루블화 강세 때문에 (수입 물가 부담이 완화돼) 러시아는 물가 상승이 둔화하기 시작한 몇 안 되는 나라의 하나가 됐다.

블루베이자산운용회사의 신흥시장 총괄자 폴리나 쿠르답코는 이것이 꼭 경제적 성공의 징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루블화 강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러시아 경제가 건강하다는 것은 분명 아니다. 성장률은 음수의 영역 깊숙한 곳에 머물 것이다. 물가 상



에너지 생산국으로서 갖는 중요성 때문에 러시아를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축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러시아 바시키리아 소재의 가스 저장 시설

승률은 두 자릿수대다. 타격이 뚜렷하게 느껴진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보면,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다. 아무것도 수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블화 강세의 효과를 완화하려고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에너지

그러나 쿠르답코는 루블화 강세의 둘째 요인을 간과하고 있다. 바로 러시아가 미국·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수위를 다투는 에너지 생산국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른 것은 푸틴 정권에 득이 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은 전쟁 전에도 이미 오르고 있었는데, 천연가스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심화된 탓이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계속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다.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에 따르면, 러시아는 개전 후 두 달 동안 선박·수송관을 통해 화석연료 630억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한다.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후 수출한 화석연료의 71퍼센트를 유럽연합이 수입했다. 약 4분의 1이 유럽연합 회원국 소재 항구 여섯 곳으로 갔는데,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로테르담항의 마스블라테 지구,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항이 그런 곳들이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4월 첫 3주간 유럽연합으로 간 일일 석유 물량은 1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즉 침공 직전 한 달 동안)에 비해 20퍼센트 줄었고, 일일 석탄 물량은 40퍼센트 줄었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 물량은 20퍼센트 늘었고, 유럽연합 바깥으로 간 물량은 80퍼센트 늘었다.”

러시아산 화석연료의 3대 수입국은 독일·이탈리아·중국이다. 독일은 전쟁 발발 후 첫 두 달 동안 90억 달러(약 11조 원)어치를, 이탈리아와 중국은 70억 달러(약 8조 6600억 원)어치에 약간 못 미치게 수입했다.

에너지 거래는 최초의 제재에서 제외됐다. 물론,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유럽 정치인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경제에 덜 차질을 줄 석유 수입 금지 조치도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금지하는 데에는 기술적 장애물도 있다. 유럽의 에너지 체계는 수송관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데 맞춰져 있다. 미국과 중동에서 LNG를 수입하는 시설을 개발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전체 공급량도 문제다. 캄브

리지대학교의 헬렌 톰슨은 이렇게 지적한다.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제재가 그토록 제한적인 것은 중국의 부상이 에너지 시장을 항구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러시아의 공급 없이는 오늘날 세계의 석유·가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러시아가 에너지 생산국으로서 갖는 위상 때문에 러시아를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쟁투가 어떻게 되든 이런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07호 / 번역 김준호

추천 책



우크라이나 전쟁,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각축전

알렉스 캘리니코스, 로잘리, 김준호, 이원웅 외 지음, 책갈피, 352쪽, 17,000원

윤석열은 억압적 국가기관들을 강화하고 있다

김문성

윤석열 정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를 본격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한다.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그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꾸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의 대응을 논의한 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 사무에 "치안 관리"를 포함시키고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45년 미군정청 경무국을 공식 기원으로 하는 경찰은 1948년 대한민국 국가 수립 후 1991년까지 내무부 치안국-치안본부 형태로 유지돼 왔다.

독재 체제 유지의 필요와 산업화·도시화 등의 사회 변화에 따라 치안(경비, 치안 정보 수집, 범죄 예방, 수사 등) 기성체제의 기본 질서 수호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은 조직·예산 등 비중이 커졌다.

독재 정부의 손발 구실을 하는 추악하고 방대한 조직에 대한 사람들의 원성과 증오도 컸다.

형식적 중립

이 때문에 1987년 6~8월 대투쟁 이후, 노태우 정부는 형식상 치안본부를 내무부의 독립외청인 경찰청으로 바꾸고, 내무부(오늘날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해 별도의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인사와 행정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양보 시늉을 했다.

물론 그런 제도 하에서도 경찰의 정권 앞잡이 구실, 체제 수호를 위한 억압적 만행들은 결코 억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경찰 권력을 억제하라는 대중의 염원에 부응하는 척이라도 해야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파 정부가 노골적으로 직접 경찰을 지휘·통제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사찰과 정보 보고, 치안 통제 등을 훨씬 더 효율적·통일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에 판사 출신으로 윤석열의 고교·대학 직계 후배이자 측근(이상민)을 앉힌 이유일 것이다.

이런 일은 국가기구 전반에 대한 통제력 강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은 공직자 사찰·검증 시스템을 개편해, 법무부에 인사 검증 기구(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이 조직이 대통령비서실의 인사기획관·인사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과 연계돼 움직이도록 했다. 이 자리들에 모두 검찰 측근



대중적 불만과 저항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윤석열 정부는 억압적 국가기관들을 강화해 탄압을 준비하고 있다

들을 임명했다.

범죄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국가수사본부장에 베테랑 수사 검사 출신자를 앉힐 수도 있다. 검·경 수사 기능이 더 일사불란해지기를 기대해서일 것이다.

이런 일을 두고 민주당과 친민주당 지식인·언론 일각에서는 '검찰공화국'화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런데 국회에서 국민의힘 장제원이 민주당에게 한 답변이 시사적이다. 경찰청장이 교체되면 경찰에도 비슷한 인사 검증 조직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참에 국정원에도 인사 검증을 맡기자고도 했다. 그러면 법무부 권한 '집중'은 아니라는 것이다.

요컨대, 다른 억압 기관들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만 문제삼는 시각은 나무를 보느라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도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이로운 때는 검찰을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의 힘을 늘려 주고, 국정원 적폐 청산은 시늉만 하다 말았다. 한편, 민주당도 안보 위기 국면에선 검·경·국정원이 합작한 간첩 조작을 활용했음을 알아야 한다. (관련기사: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오늘날 의미"(418호))



검사 출신자들만이 아니다

윤석열은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지키려고 친기업·친제국주의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그 수단으로 전통적 보수파 관료들을 중용하고, 국가기관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높여려 한다.

윤석열은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정책 관련 요직에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 관료들을 중용했다. 국방부장관·대통령경호처장, 국가안보실의 군 관련 직책에 모두 육사 출신을 앉혔다. 합참의장에도 9년 만에 육사 출신자가 임명됐다. 검찰 출신만 중용한 것도 아닌 것이다.

국방장관 이종섭은 5월 27일 육·해·공군 신임 참모총장 취임식에서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의 "자위권"은 도발 원점, 지원·지휘 세력까지 타격하는 매우 호전적인 작전 개념이다.

윤석열의 경제안보 강화 노선은 기술 보안 등을 핑계로 국정원의 강화도 동반될 것이다. 기업이 흥하는 것

이 안보라면, 기업주들의 고통 전가 공세에 저항하는 것도 안보 문제로 볼 것이고, 그에 따라 검찰·경찰·국정원·군 등의 협업도 늘 것이다.

윤석열 정부 새 인사시스템의 일부인 공직기강비서관에 국정원과 유착한 간첩 조작 사건 검사 이시원을 임명한 것, 역겨운 부패와 정치공작에 연루됐던 전 국정원장들을 취임 3주 만에 둘이나(남재준·이병기) 풀어 준 것은 국정원에 대한 고무와 격려의 신호다.

결국 지금 상황의 본질은 지배계급의 전통적 우파가 국가기구를 더 일사불란하고 반동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기관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 사찰, 집회·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 노동자들의 의식과 조직은 대체로 건재하고, 물가 인상과 소득 부진에 대한 불만은 높다. 이런 대중적 불만과 저항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윤석열 정부는 억압적 국가기관들을 강화해 탄압을 준비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 성적표는?

이 기사는 5월 26일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QR 코드)의 발제문이다.



2010년 처음으로 진보 교육감 6명이 당선됐고, 현재는 17곳 중 14곳의 시·도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된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만

1700곳 중 1만 개 이상의 학교가 진보 교육감의 관할 아래 있으니, '진보 교육감 시대'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오늘은 지난 12년을 돌아보며 진보 교육감 시대라는 말에 어울리는 개혁이 있었는지 개괄적으로 평가해 보고,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얘기해 보려고 한다.

진보 교육감 등장 배경

진보 교육감의 등장과 대거 당선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째, 신자유주의적 경쟁 교육에 대한 반감과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이 컸다. 김대중 정부 때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더해, 이명박 정부는 자사고를 늘리고 일제고사를 도입하는 등 경쟁 교육을 가속화했다.

이에 반발해 2008년 5월 청소년들이 '미친 교육 OUT'을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당시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 구호는 경쟁에 내몰린 청소년들의

심정을 절절하게 보여 줬다.

둘째,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반우파 정서, 대중 운동의 부상과 맞물렸다. 2008년 촛불 운동, 2014년 세월호 참사와 항의 운동, 2016년 말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등의 결과로 각각 2010년, 2014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체로 우파 정당이 밀렸다.

이에 더해,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저항해 온 전교조 운동,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화도 진보 교육감의 탄생에 일조했다.



2010년 당시 박노현 서울교육감에게 "일제고사 좀 없애 주세요" 하고 외치는 초등학생들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이 지났지만 입시 경쟁 교육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대중의 변화 염원은 얼마나 충족됐나?

한국의 끔찍한 교육 현실에 넋더리가 난 많은 사람들이 경쟁 교육을 비판하고 새로운 교육을 약속한 진보 교육감을 지지했다.

2010년 박노현 서울 교육감이 당선된 직후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벌어진 광경은 학생들의 바람을 단적으로 보여 줬다. 아이들은 꼭 교육감에게 우르르 몰려가서 "일제고사 좀 없애 주세요" 하고 소리쳤다.

진보 교육감들은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 인권, 학교의 민주적 운영, 학생 자치, 교육과정·수업 혁신 등 학교 교육의 여러 측면에서 얼마간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을 지지한 대중의 가장 큰 바람은 경쟁 교육의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진보 교육감들의 제1 공약도 줄곧 입시·경쟁 교육 해소였다.

이런 기대와 약속은 얼마나 충족됐을까? 지난 12년을 세 시기로 나눠 간략히 살펴보자.

1기는 2010년 서울과 경기 등 6개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며 시작됐다. 이 시기는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 중 비교적 역동적인 때였다. 진보 교육

감을 탄생시킨 운동이나 조직은 여전히 활력이 있었다. 초반에 진보 교육감들은 중앙 정부와의 갈등에서 저항하는 모습도 보여 줬다. 진보 교육감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 인권은 대부분 1기의 성과다.

1기의 주요 시험대는 일제고사와 교원평가였다. 전북·강원 교육감은 학교들이 일제고사를 불지 말지 선택할 수 있게 했고, 교원평가의 평가 방식을 바꾸는 등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 교육감 등은 우파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2기에는 진보 교육감 지역이 13곳으로 크게 늘었다. 그들은 고교 평준화 확대, 자사고 폐지, 대학 평준화, 대입 제도 개선 등 입시 고통 해소와 교육 복지 강화 등을 공통으로 약속했다. 진보 교육감이 시·도 교육청의 과반을 차지하자 기대도 높았다.

그러나 그들의 실전은 기대와 달랐다. 2기의 주요 시험대는 특권 학교인 자사고 폐지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였다. 2014~2015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진보 교육감 다수는 자사고들을 살려 줬다. 자사고의 절반 이상이 있는

서울의 조희연 교육감은 우파의 반발에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완패했다.

진보 교육감들은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을 비판했다. 당선 전에는 "잘못된 정부에 복종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당선 후에는, '노조 전임자를 복귀시키고 따르지 않으면 해고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일찌감치 받아들였다.

2016년에 '직선 2기 교육감 전반기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진보 교육감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현장 교사들은 교육감이 바뀌었는데 왜 학교는 바뀐 게 없냐고 하소연했고, 진보 교육감 당선을 그토록 바랐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에 고통받았다. 기대가 실망과 배신감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18년부터 시작된 3기에는 한 곳이 더 늘어 총 14곳이 진보 교육감 지역이 됐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가 쫓겨나면서 이제야말로 진보 교육을 펼칠 시대가 열릴 거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너무도 달랐

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 배신을 거듭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도 외면했다. 정시 확대, 자사고와 특목고 유지, 교원 감축 등 다른 교육 정책도 전임 우파 정부와 별다를 게 없었다.

문제는 진보 교육감들이 공동 성명을 몇 차례 발표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외면을 비판했을 뿐, 실질적인 도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은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교육 개혁 구상을 갖고 있었고, 스스로를 중앙 정부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한국 교육의 일대 개혁과 혁신"을 기대케 했던 "문재인 정부와 진보 교육감 시대의 결합"은 '교육 개혁의 실종'으로 결론이 났다.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사기극으로 끝났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크지만, 진보 교육감들도 전혀 이름에 값하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진보 교육감들은 정규직화를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도 적게 시행했고 노조와의 대화도 거부했다. 경기 교육청은 전체 심의 대상자 중 고작 6퍼센트만 전환 대상자로 발표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분을 샀다.

변화가 미미한 이유

지금까지 주장을 종합해 보면,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 동안 기대만큼의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다. 혁신학교가 수천 곳으로 늘어났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입시 경쟁의 고통에 시달린다. 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 복지가 조금씩 확대되긴 했지만, 교육 양극화는 심화했다.

일부 지역에서 고교 평준화가 확대되긴 했으나, 특권 학교와 고교 서열 체제는 굳건히 유지됐다. 사교육비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민주주의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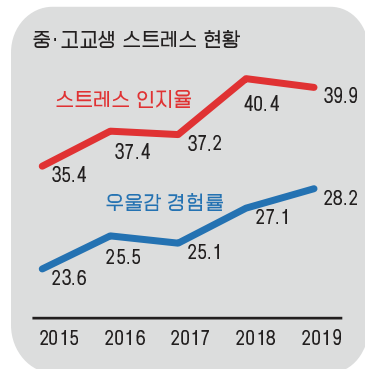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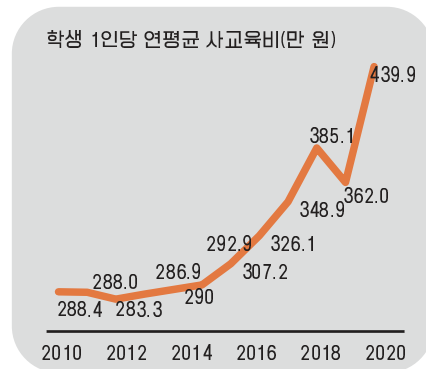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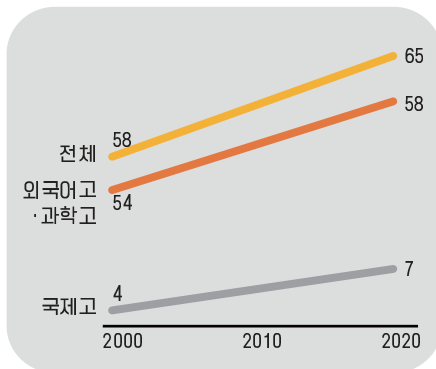
물론 진보 교육감들 사이에 차이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진보성이 열어지는 방향이었다. 진보 교육감들의 개혁은 왜 이렇게 초라한 수준에 그쳤을까?

우선, 교육청과 교육감의 근본 성격, 즉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일부이자 학교 노동자들의 사용자라는 성격을 봐야 한다. 교육감은 자본주의 교육제도를 유지·관리하는 교육청의 근본 역할을 수행하라는 압박을 받는다.

이 압박 속에서 진보 교육감들의 강조점이 처음에는 평등 교육과 교육 복지였지만 점차 '기초 학력'이나 '미래 역량'으로 이동하고, 혁신 교육과 입시 교육의 절충, 평등 교육과 수월성 교육의 절충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경쟁 교육에 맞

크게 바뀌지 않은 교육 현실



서는 공교육의 대안 모델로 출발한 혁신학교가 이제는 학력 향상이나 입시에도 유능함을 입증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 모델로 인정받으려 애써야 하는 상황이다.

또 작은 학교 살리기를 약속한 진보 교육감이 당선 후 입장을 바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이는 재정 효율화 논리 때문이었다.

둘째, 진보 교육감의 모순된 처지는 교육의 진보적 변화를 바라는 대중을 분명하게 대변하기보다는 좌우를 아우르려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많은 교육감들이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는 식으로 말한다.

그러나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자사고 폐지 등 작은 개혁을 놓고도 좌우가 대립해 왔다. 이런 현실에서 좌우를 아우르려다 보면 결국 개혁 후퇴의 방향으로 미끄러지기 쉽다. 예를 들어, '충북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본부'의 상임대표였던 김병우는 정작 교육감이 된 뒤에는, 우파의 반발을 의식해 별 실효성도 없는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을 채택하는 데 그쳤다.

진보 교육감들은 정부와 우파에 맞서기를 주저하면서 자신의 재량권조차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특목고에는 손뼉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18년 강원외고는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얻어 특목고 지정 취소 신청을 냈는데, 민병희 강원 교육감은 이 신청을 부결시켰다. 심지어 장석웅 전남 교육감은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하려다 반발을 사고서야 중단했다.

셋째, 진보 교육감들은 위로부터의 점진적 개혁을 추구했다. 예를 들어,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2014년에 자사고 폐지를 1년 유예하면서 "설득과 유인"을 통해 자사고를 "고사"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결과를 알다시피, 이것은 개혁 목표를 향해 천천히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결국 개혁에서 멀어지는 길이었다.

또, 진보 교육감은 관료적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현장 교사들의 참교육 실천 운동의 일환이었던 '새로운 학교 운동'이 교육청의 사업이 되자, 교사들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전락했다.

반자본주의적 운동의 필요성

진보 교육감 당선은 교육 변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진보적 교육 개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교육 개혁을 위한 투쟁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고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제한하거나 온건화 압력을 넣는 모순적인 구실을 할 수도 있다.

진보 교육감 당선이 자동으로 개혁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진보 교육감과 '거버넌스 구축'이 아니라, 대중의 기대와 열망이 열어 주는 틈을 활용해 아래로부터 독립적인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보 교육감이 제공할 수 있는 개혁의 수준도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운동, 노동운동 진영의 투쟁에 달려 있다.

아래로부터 대중 투쟁은 개혁의 성취뿐 아니라 노동계급의 주체적 역량을 키워 근본적 변혁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실, 사회의 근본적 변화 없이 지금 같은 혹심한 경쟁 교육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경험하는 경쟁과 차별, 소외와 억압은 근본적으로 교육이 자본주의의 필요에 종속된 결과이다. 미래의 노동자들을 위계화된 노동시장에 배치하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교육은 근본적으로 경쟁적이고 차별적이다.

모두에게 질 높은 평등 교육의 실현을 바란다면, 반자본주의적 전망이 필요하다. 그런 전망 속에서만 개혁을 위한 투쟁도 급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정원석 전교조 조합원

왜 저항은 시원찮았을까?

그런데 진보 교육감들의 거듭된 후퇴에도 저항은 시원찮았다. 그 이유를 전교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자 교육청을 활용해 교육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가 점점 커졌다. 전교조 지도자들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리지 않고, 진보 교육감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했다. 진보 교육감과 협력해서 위로부터 개혁을 성공시킨다는 전망을 택한 것이다.

많은 상층 활동가들은 진보 교육감을 성공케 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전교조의 "진짜 실력"이라고 믿었다. 많은 전교조 조합원

들이 장학사, 장학관, 보좌관, 비서 등으로 교육청에 들어갔다. "교육청 기구에 직접 참여해 보수적 관료들을 견제하고 진보적 교육 정책을 관철"시키겠다며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교육청을 바꾸려 들어간 활동가들 자신이 바뀌곤 했다. 교육청을 견인하라고 파견된 사람들이 역으로 노동조합을 통제하려 들었다.

진보 교육감과 협력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는 노동조합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노동조합 상근 간부들은 진보 교육감의 후퇴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삼갔

고, 점점 더 교육감과 충돌을 피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수동적으로 교육청을 바라보는 경향이 자랐다. 혁신학교가 투쟁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향도 커졌다. 전교조 활동가들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진출하는 사례도 늘었다.

투쟁을 멀리하고 진보 교육감과 협력에 기대는 동안 노조의 진정한 힘인 조직력과 투쟁력은 점점 약해졌다. 그 결과 진보 교육감들의 후퇴는 더 쉬워졌다. 결국 교육 개혁 성공을 위해 투쟁을 자제한 것이 오히려 개혁의 진정한 동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바이든 아시아 순방 이후

아시아에서 긴장이 커지다

김준호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아시아 순방으로 대(對)중국 압박 동맹을 다졌고, 이후 긴장이 좀 더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순방 직후인 5월 2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명분 삼아 동맹국들과의 “상시 공조 체계”를 과시했다. 5월 28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이 발표됐고, 6월에 3국 장관급 회담도 추진 중이다.

이런 공조의 목표로 공동성명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매우 위선적인 것이다. 바로 얼마 전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한국과 핵 개발 협력을 합의했고, 유사시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 전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명시했다.(관련 기사 본지 418호 ‘바이든 방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에 좀 더 깊이 발을 담근 한국’)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키우기이다. 5월 24일 쿼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위협, 무력, 기존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 일체에 맞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을 때도, 분명 중국의 부상에 맞선 동맹을 뜻하는 것이었다.



위기를 몰고 올 자 5월 20일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 바이든이 장성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은 5월 26일 연설에서 이를 터놓고 말했다. 블링컨은 연설에서 중국을 84번(러시아는 4번)이나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국제 질서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인 중국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블링컨은 “중국의 전망은 세계적 발전 과정에서 75년간 유지돼 온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

다. 이는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래로 주의 깊게 구축한 질서, 즉 미국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자유 시장 제국주의(‘규칙 기반 질서’)에 중국이 걸림돌이 된다는 뜻이다.

미국은 경제·지정학 영역 모두에서 중국의 부상에 맞서 자국의 우위를 지키려 한다.

경제 영역에서 블링컨은 미국의 역량을 키울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첨단기술·무역·제조업(예컨대 철강) 등 “핵심 영역에서 대(對)중국 경쟁 우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 목표는 바이든이 이번에 창설한 경제 네트워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반영돼 있다. 블링컨은 IPEF가 “[중국의 부상에 맞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미국과 목표·대의를 공유하는 동맹국·파트너들을 결집”시킨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다.

블링컨은 동맹 네트워크가 “미국이 추구하는 미래를 현실화하기 위한 미국의 비대칭 전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블링컨은 IPEF 같은 경제 협정뿐 아니라 쿼드·오키스 등 안보 동맹들, 대서양 군사 동맹인 나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바이든은 취임 초부터 동맹들을 결집시키려 애써 왔다(관련 기사 본지 372호 ‘바이든의 동맹 복구, 목적은 무엇이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인도-태평양의 파트너들과 유럽의 파트너들 사이에 가교를 놓기 위해 아시아 동맹국들을 6월 마드리드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했다.”(블링컨)

윤석열의 친미 행보와 그 모순

한국은 미국 측의 행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신임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 후 2주도 안 돼 한미 정상회담을 해, 경제·안보 영역 모두에서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 나경원을 특사로 파견해 미국의 “ABCDE 협력 구상”에서 한국이 “세계적 축” 구실을 하겠다고 자임했다. “ABCDE”란 첨단 기술(A), 바이오(B), 기후(C), 디지털 경제(D), 에너지(E) 5개 분야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미국이 미·중 갈등 와중에 공급망 재편에 주력하는 5개 부문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일련의 행보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재확립 과정에 적극 동참해 한국 자본주의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쪽에 베풀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런 베풀기는 한국 지배자들에게도 상당한 고민거리를 안겨 준다. 한편으로, 한국의 대자본가들은 기본

적으로 한미동맹을 우선하고, 향후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 동조해 세계 시장을 두고 중국계 첨단기술 자본들과 벌이는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를 바란다.

다른 한편으로, 한·중 간 경제적 관계가 상당하기 때문에 한국의 대자본가들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행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은 블링컨의 연설을 두고 “협박 외교의 발명자이자 대명사인 미국이 … 자신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세계를 위협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반발은 말에 그치지 않았다. 바이든의 아시아 순방 직후인 5월 26일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남태평양 11개국 순방에 나서, IPEF에 ‘구멍’을 뚫는 경제 협상을 도모하는 한편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를

겨냥하는 군사 기지 마련을 추진했다.

더 직접적인 무력 시위도 있었다. 쿼드 정상회담 중이던 5월 24일 중국군과 러시아군은 한반도 동해 상공에서 합동 훈련을 했다.

대만해협

특히 대만해협이 미국과 중국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으로 거론된다. 블링컨은 연설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대만이 충분한 방위 능력을 유지하는 데 미국이 지원을 유지·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왕원빈은 이를 비판하며 대만 문제에서 “어떠한 타협과 양보의 여지도 없다”고 못 박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이 공공연히 제기돼 왔던 것을 떠올리면 이는 서늘한 경고다.(관련 기사 본지 398호 ‘화약고로 떠오른 대만해협: 대만 문제는 무엇이며 왜 악화되고 있는가?’)

그런 충돌은 결코 어느 한 지역에 국

한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대만해협에서의 미·중 간 전쟁 상황을 상정하고 미국 공군이 진행한 ‘위계임’(모의 전쟁) 결과를 보도했는데, 그에 따르면 미군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군사 작전을 벌인다는 조건 하에서 미국이 중국에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는 대만해협을 두고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고 불이 붙으면 그 참화가 아시아 곳곳으로 번질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런 상황에서 운동 내 온건파들이 미국의 제국주의 질서를 ‘권위주의에 맞선 민주주의 질서’라며 차악 취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런 견해로는, 한국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아시아 지역 전체의 불안정에 일조하고 있는 것에 대처할 수 없게 된다.

아시아에서 위험이 점차 커지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과 우파 본색에 저항할 정치적 대중 운동들을 구축하는 것이 더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식량 위기로 세계 곳곳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의 30퍼센트, 해바라기유의 69퍼센트를 생산한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수출이 차질을 빚으며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후 위기도 식량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전쟁이 불평등, 기후 위기 등 자본주의가 낳고 있는 다른 위기들과 중첩되며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위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쟁, 기후 위기, 불평등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세계 곡물가가 치솟자, 3월 초 이라크 남부 나시리아 등에서 식량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2019년 대규모 반란 후 3년 만이다. 시위대의 구호는 “혁명은 배고프다”였다.

식량 위기는 이미 오랜 제국주의 개입으로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는 얹힌 데 얹힌 격이다. 이라크 같은 나라에서 사막화와 폭염은 식량 위기를 더 부채질하고 있다.

최근 이라크에서 발생한 모래 폭풍이 수 주째 지속되며 인근의 이란과 걸프 국가들까지 뒤덮고 있다. 이라크 보건부는 모래 폭풍 때문에 호흡기 환자 5000여 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이라크에서 모래 폭풍은 드문 현상이 아니다. 늦봄과 초여름에 자주 찾아오는 자연 현상이지만, 올해 들어서는 3월부터 한 주도 빠짐없이 벌어지고 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강수량과 더불어 사막화가 그 원인이다.

이라크의 사막화는 기후 위기로 더 가속화하고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라크를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염분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진 것이다. 이로 인해 녹지가 메마르고 농지가 황폐해지며 사막화가 가속하고, 기록적인 모래 폭풍이 발생하고 있다.

이라크는 수십 년간 지속된 서방의 제재와 전쟁, 그리고 점령이 남긴 폐허와 권력층의 부패 때문에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할 여력이 없다. 2019년에 이라크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도 5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과 전기가 하루에 2~3시간 간신히 들어오는 전력 부족 문제에 항의한 것이다.

남아공 출신 고 데즈먼드 투투 추기경은 기후 불평등 상황을 두고 ‘기후 아

지난 3월 이라크에서 벌어진 식량 가격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

파트헤이트라 꼬집은 바 있다. 값비싼 자가 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는 부유층과 지배계급은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을 켤 수 있지만, 절대 다수의 이라크인들은 속수무책으로 기후 위기에 노출돼 있다.

이라크는 위기에 처한 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일 뿐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곡물에 크게 의존하고, 기후 위기에 취약하다. 오랜 전쟁과 내전을 겪어온 북아프리카·동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기근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서방의 위선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수출을 막으며 식량을 무기화한다고 비난한다.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인 수백만 명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식량 공급이 “러시아군에 사실상 인질로 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서방은 러시아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미국과 서방도 식량을 무기화해 온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서방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전쟁 범죄나 쿠데타를 저지른다고 규정한 “불량” 국가에게는 식량 수출을 막아 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동맹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땐 철저히 눈을 감아 왔다.

현재 예멘은 식량 수입과 원조가 막혀 1700만 명이 식량 불안정* 상태에, 수백만 명이 아사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의 주요 동맹이자 원유 공급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예멘의 항구를 폭격하고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조차 예멘에서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어떤 서방 국가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재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오히려 막대한 규모의 무기를 팔 뿐이다. 트럼프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판

매한 무기는 9조 원어치가 넘는다.

저항

서방 지도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걱정하는 듯한 말을 늘어 놓지만, 진정한 관심사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해관계뿐이다.

식량 가격이 폭등하면서 기후 위기와 불평등으로 불만이 쌓여 온 대중의 분노가 폭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이라크와 수단, 이란 등에서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있었다. 물가 인상과 생활고에 분노한 스리랑카의 시위대는 총리와 대통령 일가의 호화 저택들을 불태워 버렸다.

식량과 생필품을 배분할 수 있는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된 이 체제 자체에 도전해야만 이런 위기를 끝낼 수 있다. 멀게는 1917년 러시아 혁명, 가깝게는 2011년 ‘아랍의 봄’ 혁명에서 전쟁과 물가 인상에 맞선 반란과 파업의 물결이 있었다.

이런 대중 저항은 독재자와 제국주의 세력을 무너뜨릴 잠재력을 갖고 있다.

박이랑

용어설명

식량 불안정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심각한 식량 불안정이란, 적절한 식량 섭취가 없으면 생명이나 생계가 즉각적인 위협에 빠지는 상태다.

반정부 시위대가 불태운 스리랑카 장관의 집

우체국 택배

임금 삭감과 쉬운 징계·해고 추진하는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과 쉬운 징계·해고를 추진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인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은 2년마다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위·수탁 계약을 맺는다. 현 계약 기간은 6월 말까지로, 7월 1일자로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사용자 측은 개약된 새 계약서를 제시했다. 노동자들의 조건 전반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내용들이다.

택배 노동자들은 건당 수수료(배송하는 물건당 수수료)가 임금의 거의 전부다.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지키려고 투쟁해 왔다. 그 결과, 현재 단체협약에는 임금 하한선 기준 격인 1인당 하루, 주 단위 물량을 명시했다.

그런데 사용자 측은 새 계약서에서 (개인별이 아니라) 배달 권역별로, (하루, 주간 단위가 아니라) 연간 물량으로 그 기준을 완화했다. 더욱이 우편물 감소나 사업 환경 변화 시 기준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면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 또 일이 많고 적음에 따라 임금이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

노동자들이 분노하는 또 다른 독소 조항은 징계와 해고 절차를 완화하는 것이



노동자들은 그간 투쟁으로 지켜온 성과를 뒤로 돌리려는 우정사업본부에 맞서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5월 30일 우체국 택배노조 전국 간부결의대회

다. 관리자들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보다 손쉽게 업무(계약)를 일시 정지시키거나 계약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택배 차량에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정해진 규격 외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등 관리자들의 요구를 거부하면, 1차 서면 경고 → 2차 10일 계약 정지(업무 중지) → 3차 30일 계약 정지 → 4차 계약해지(해고) 하겠다고 한다. 노조 활동을 위한 현수막을 붙이거나 관리자의 눈 밖에 나면 월 임금의 3분의 1 이상을 삭감하거나 심지어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새 계약서에는 “정책 변화, 물량 감소, 폐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노동자들은 새 계약서가 사측 마음대로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들을 “쉽게 뱉을 수 있는 껌”으로 여기는 “노에게약서”나 다름없다고 성토했고 있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5월 30일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가 없을 때, 관리자들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해고한다’는 말을 일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건설하고 투쟁

해 왔습니다. 사측은 노조가 없던 과거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투쟁기금 10만 원 동의서와 계약서 작성 위임장(노조에 개별 계약서 작성을 위임)을 받았다. 며칠 만에 조합원 2700여 명 중 90퍼센트가 동참했다.

노조는 6월 초 정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6월 14일 1차 경고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신정환

‘북한 주적론’ 되살린 윤석열 정부

더 고조될 한반도 긴장, 더 강화될 사병 통제

윤석열 정부가 군대의 병사 정신교육 자료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담았다. 병사들에게 ‘북한 주적관’을 심어 줘 정신 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더한층 협력하며, 대북 강경 태세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때도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나 “선제타격” 같은 섬뜩한 얘기를 했다. 정신 무장 강화는 이런 기초의 연장선이다.

그리고 정신 무장 강화는 전투 태세 강조와 사병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5월 27일 신임 육군참모총장

박정환은 취임식에서 “훈련 또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지금 당장, 그리고 미래에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 ... 끊임없는 실전적 훈련을 통해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오늘 밤에도 싸울 수 있다) 전투태세를 갖춰야 한다.”

아마도 한미동맹과 실전적 훈련의 결합은 한미연합훈련을 대규모 기동 훈련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표현될 듯하다. 5월 24일 한국 공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주력 전투기 F-15K 수십 대가 최대 무장을 장착하

고 활주로를 누비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하기도 했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호전적 행보는 북한만 겨냥하는 게 아니다. 미·중 갈등과 제국주의적 긴장 고조와 갈등 격화라는 더 크고 심각한 정세에 대응하는 것이다. (관련 기사: 바이든 방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에 좀 더 깊이 발을 담근 한국)

그리고 이는 국내 저항을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군비는 증가시키면서 노동자들에게는 더 많은 양보를 강요하고, 저항을 더 강하게 단속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보수적·애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더 강화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군을 우대하고, 군 영웅을 존경하는 보훈 문화 조성을 국정 과제에 포함시켰다.

새 군 수뇌부가 ‘경계태세 강화’, ‘강군 육성’과 정신 무장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연관돼 있다. 이런 강조는 군대에 징집된 (대개 노동자와 서민층 자녀들인) 사병들이 더 힘든 군 생활을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삶에 더 큰 위협을 가할 것이다.

이재혁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회원

반복되는 장애인 ‘가족 살해’의 비극

김미연 초등특수교사

또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5월 23일 서울 성동구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세 아들을 안고 아파트 21층에서 뛰어내렸다. 두 사람 모두 숨을 거뒀다.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도 60대 여성이 중증 장애가 있는 30대 자녀에게 수면제를 과다 복용케 해 살해하는 일이 있었다.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으나 수면제가 부족해 살아남았다. 대장암 진단을 받고 자녀를 계속 돌보기가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

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런 비극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두 달 전에도 수원과 시흥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모가 살해하는 일이 있었는데, 한부모 가정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다. 가난한 가족에게 떠넘겨진 돌봄의 무게가 ‘가족 살해’라

발달장애인 가정에서 벌어지는 ‘가족 살해’ 비극을 끝내려면, 국가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사람들을 떠미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은 발달장애인 가정에 더 큰 재앙으로 다가왔다. 그나마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었던 각종 시설이 휴관하고, 돌봄 사업이 축소·중단됐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20.5퍼센트가 돌봄을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코로나19 기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 조사〉, 국가인권위). 지원이 꼭 필요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상황은 더 악화됐다.

이 비극들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턱없이 부족한 국가 지원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투쟁으로 2014년에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고, 2018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그러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

예컨대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는 하루 2시간에서 최대 5.5시간밖에 제공되지 않는다. 게다가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른 필수 지원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시간이 대폭 차감된다(2022년 3월 기준 최소 22시간에서 최대 56시간).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위해 꼭 필요

해 “장애인의 생존권”이라 불리는 ‘활동지원서비스’에는 다른 문제도 많다. 2019년에 도입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는 복지 이용자의 필요가 아니라 예산의 총량에 맞춰 설계됐다. 이 때문에 기존에 받던 서비스 시간이 대폭 삭감되거나 일부 장애인의 경우엔 수급 자격이 아예 박탈됐다. 이것도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전국에 8개밖에 없어 서비스 이용이 매우 어렵다. 2020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여기서 진료를 받으려면 평균 석 달 이상, 최대 1년 2개월을 대기해야 한다.

개선 의지 없는 윤석열 정부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국정과제에서 발표한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장애인 일자리와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두루뭉술한 말만 있을 뿐이다. 발달장애인과 가족 556명이 삭발까지 하면서 요구한 ‘발달장애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 구체적

요구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

예산이 확충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효성이 없는데,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들의 예산 확충 요구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게다가 5월 26일 죽음으로 내몰린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 설치를 폭력적으로 막기까지 했다.



‘사회적 타살’인 죽음들 삼각지역에 설치된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

국가 지원을 대폭 늘려라

2018년에 벌어진 ‘장애인 자녀 살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다.

“오롯이 피고인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할 만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법원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상 발달장애인인 피해자와 그 가족인 피고인이 위 규정에 따른 충분한 보호나 지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단지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이처럼 장애인 돌봄은 개별 가족에 내맡겨질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지배계급은 노동력으

로서 쓸모가 없는 집단(노인·장애인·중증 환자 등)에 투자할 열의가 거의 없다. 그래서 기업 지원이나 군비 지출과 달리, 보건이나 돌봄 복지를 늘리는 일에 매우 인색하다.

발달장애인 가정에서 벌어지는 ‘가족 살해’ 비극을 끝내려면, 이런 이윤 논리를 거슬러야 한다.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국가가 지원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해야 한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고 막대한 군비를 삭감해 필요한 복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런 비극을 끝낼 수 있다.

국가의 책임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요구하는 투쟁에 지지를 보낸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

고 한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되어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렴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 2021년 2월 27일 개정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workerssolidarity.org/join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10-6491-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online

f 노동자 연대
@ wspaper_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가기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시사/이슈 토크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읽시즘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새 코너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기후 정의,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 탈성장과 핵발전 등 총 10회에 걸쳐 기후 위기 문제와 운동 내 쟁점을 다룹니다.

구독하시면, 지금 꼭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창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다영코리아 인쇄소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외국인보호소에 7월부터 전신 결박 의자 도입

‘새우깍기’ 고문 폭로 이후 외려 억압 강화

임준형

5월 25일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대폭 늘리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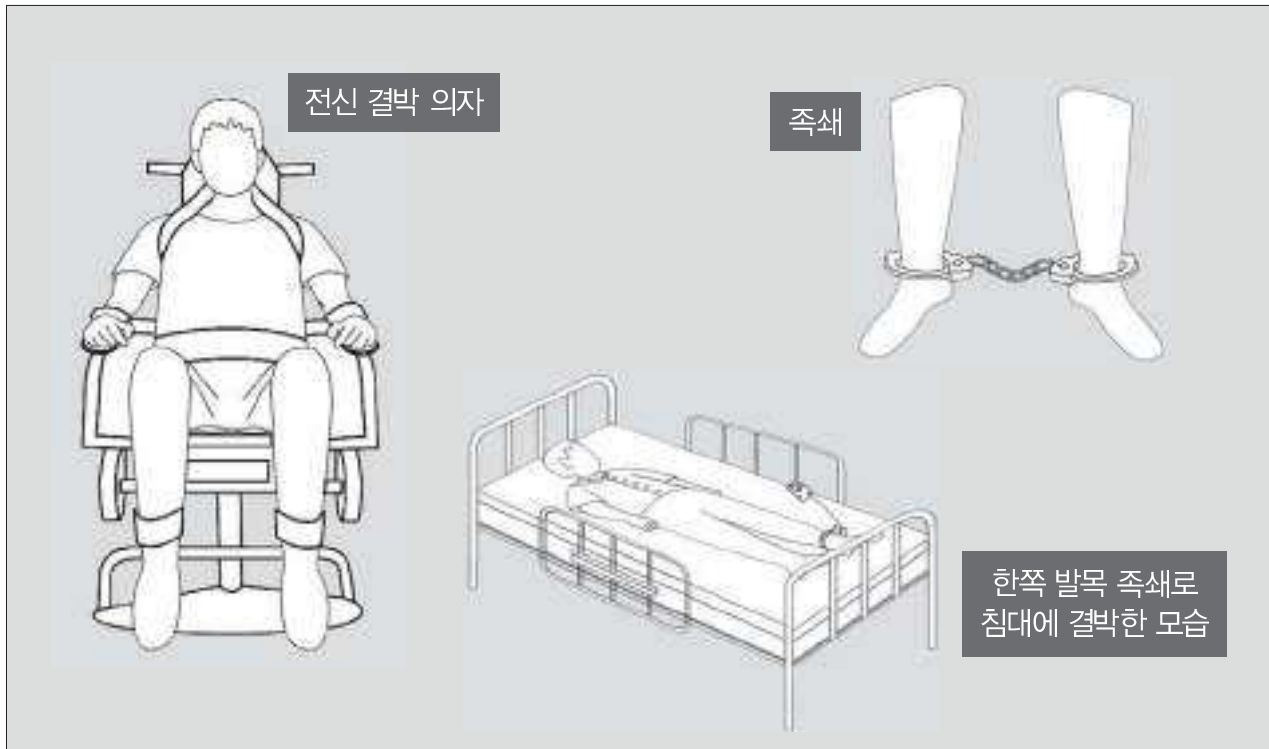
심각한 기본권 제약 사안을 국회 논의조차 없이 규칙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개악안은 7월 4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언제든 시행될 수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난민에게 ‘새우깍기’ 고문을 한 사실이 폭로되자, 정부는 “사용 가능한 보호장비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명시”하겠다고 등 대책을 내놔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수갑, 밧줄형 포승, 머리보호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악안은 여기에 전신 결박용 의자, 족쇄, 보호대 등 5종을 추가한다.

애초 법무부는 전신 결박 침대와 상체 결



박 보호복 등 더 많은 장비를 추가하려 했다. 그런데 지난 2월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에 앞서 국가인권위도 내부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자 일부를 제외했다.

인권 침해 방지 대책도 기만적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인권보호관 제도, 독방 구금(특별 계호)에 대한 절차와 기간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개선인 것처럼 호도한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허점투성이다.

인권보호관은 출입국·외국인청장이나 외국인보호소장 등이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소속 공무원 중에 지정하게 돼 있다. 독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독방 구금 기간은 3일 이내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 3일을 연장할 수 있다.(하루가 지나면 재개할 수 있다.) 현재 각각 5일씩인 것보다 개선이지만, 새우깍기 고문 피해자가 대부분 6일 이내로 반복적 독방 구금을 당했던 것에 비춰 보면 큰 개선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독방 구금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새우깍기 고문 사실이 폭로되고도 무려 5개월간 피해자를 석방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법무부 장관이 이의신청을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다.

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들은 열악한 환경, 직원들의 비인간적

인 처우와 모욕·폭력에 때때로 항의하기도 한다. 새우깍기 고문 피해자는 극심한 치통에 시달렸지만 외부 병원에서 진료받게 해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자 삼푸 두 병을 마시고 기물을 파손하는 방식으로 저항했다. 구금된 상황에서 다른 방도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보호소 측은 이런 항의와 저항을 ‘난동’과 ‘자해 시도’라고 비난하며 때로는 가혹 행위 등 폭력을 동원해 제압해 왔다. 이번 규칙 개악은 이를 뒷받침하고 합법성을 부여해 주려는 것이다.

구금된 이주민에게 더욱 강하게 출국을 압박하는 것도 개악을 추진하는 이유일 것이다. 구금된 이주민들은 결박 장비들로 모멸적인 행위를 당하거나, 혹은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면 차라리 강제 출국에 응하는 것이 낫다고 여길 수 있다. 특히 장기 구금되는 경우가 많은 난민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구금된 이주민들은 가난과 박해, 전쟁 등을 피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일 뿐 범죄자가 아니다. 외국인보호소 결박 장비 확대 개악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공포심·굴욕감 주고 안전까지 위협

추가되는 결박 장비는 교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외국인보호소가 그 이름과 달리 교도소와 다름없는 구금 시설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전신 결박용 의자는 미국 등에서 사형 집행 시 사용되는 의자와 겉모습이 비슷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구금 이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족쇄의 사용은 노예제를 떠올리게 하는 굴욕적인 처우다. 그래서 ‘유엔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준칙’(만델라 규칙)은 족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머리보호장비는 머리에 압박을 가해 고통을 주고 호흡을 방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개악안은 이런 결박 장비들을 최대 6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사용 후 3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용 시간에 대한 조항이 아예 없었지만, 새우깍기 고문이 한 번에 20분에서 최대 3시간가량 지속됐던 것에 비춰 보면 개선이 아니라 가혹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에 가깝다.

게다가 결박 장비를 사용한 후 담당 의사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주말과 야간에는 당직 의

사가 없는데다, 의사들이 외국인보호소 근무를 기피해 담당 의사가 공석인 경우도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지난해 4월 기존 의사가 퇴직한 후 7월 말까지 6차례나 의사 모집 공고를 다시 냈다. 이때 결박 장비를 사용하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제대로 조치하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5월 부산구치소에서 결박 장비에 묶여 있던 한 수용자가 입소 32시간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구치소 측은 공황장애와 수면장애가 있던 그에게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4시간 20분 동안 보호대와 족쇄를 채웠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들은 장기 구금과 열악한 환경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에게 지금보다 더 억압적으로 결박 장비를 사용하면 부산구치소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심지어 개악안은 현재 90일인 보호소 내 CCTV 영상 보관 기간을 30일로 축소한다. 구금된 이주민이 그 안에 소송 등을 거쳐 영상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새우깍기 고문 피해자도 피해 영상을 다 확보하지 못했다. 인권 침해 방지가 아니라 인권 침해 폭로 방지가 개악안의 목적인 것이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시도 중단하라

장호중

4월 5일 국내 핵발전소 운영을 총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수명이 다 된 노후 핵발전소를 수리해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첫 대상이 고리 2호기다. 이 발전소는 내년 4월 8일이면 40년인 설계 수명이 끝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한 시도에 반대한다. 특히 고리 2호기는 대도시인 부산에 인접해 있어 중대사고가 날 경우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인구가 335만 명에 이른다.

고리 2호기 폐쇄를 위한 부산시민행동과 탈핵시민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수명 연장 조치에 맞서 6월 18일 부산에서 집중 집회를 연다. 핵 없는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 누구나 이 행동에 지지를 보내야 한다.

기후 운동은 특히 이 행동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할 필요가 있다. 핵발전 확대는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들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를 짓는 데에만 최소 10년이나 걸리는 데다 어마어마한 자원이 투입된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에 시급히 투자해야 할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다. 재생에너지가 대안이 못 된다는 것이 찬행론의 핵심 논리여서 기후 위기 대응을 방해하는 논거로 작용한다.

기후 운동과 탈핵 운동은 핵 없는 세상을 위해서라도,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해서라도 막대한 자원을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라고 요구하며 함께 싸워야 한다.



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무려 10개의 노후 핵발전소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

정부의 경제성 논리를 거부해야

한편, 탈핵 운동 일각에는 정부의 경제성 논리를 수명 연장 반대에 역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는 듯하다.

정부의 경제성 평가는 땀집에 드는 비용과 연장된 10년간 판매할 전기 가격을 비교하는 식이다. 당연히 비용을 적게 가정할수록 경제성이 높게 계산될 것이다. 안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경제성 논리를 역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측도 이 점을 노린다. 수명 연장 조치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면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수명 연장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실제로 월성 1호기의 경우, 한수원 측이 예상 비용을 줄이려고 최신 기술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긴 점이 법원에서 인정돼 수명 연장 결정이 취소된 바 있다.

그러나 탈핵 운동은 경제성 논리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건설·수리 비용에 얼마나 쏟아붓든 핵 발전을 안전하게 만들 수는 없다.

예컨대 방사성 물질이자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의 반감기

는 2만 4300년이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양의 방사선이라도 암 발병 위험을 조금씩 높인다." (미국 과학아카데미)

지금으로서는 이 위험한 물질을 물탱크나 콘크리트와 납으로 둘러싼 격납 용기 안에 넣어두는 게 최선이다.

당연히 그 긴 시간 동안 구조물이 버틸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때도 지진으로 물탱크가 깨지고 물이 말라버려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하물며 부품과 구조물이 낡고 손상된 핵발전소를 땀집해서 계속 가동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정부의 경제성 논리를 받아들이면, 핵발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본질적 쟁점을 흐리게 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쟁점에 발목 잡힐 수 있다. 문재인 정부 관료들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서류를 조작하려 한 일이 그 사례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반지성'적 불법 행위로 못박으려고 한다.

또, 경제성 논리를 받아들이면 전기요금 인상에 일관되게 반대하기 어렵다. 전기요금 인상을 받아들이면, 탈핵 운동이 노동자 대중의 지지와 참여를 끌어내기는커녕 반감을 사게 될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건설이 보류된 신한울 3~4호기도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했다. 핵발전소 건설을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생략·단축하겠다는 뜻이다.

위선적이게도 정부와 기업주들은 핵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 운운하며 핵발전 확대를 정당화한다. 고양이를 쥐 생각하는 격이다. 자본가들은 쥐꼬리만한 최저임금 인상도 못마땅해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완화하려고 한다. 그저 핵발전이 필요하니, 그 일을 수행

할 노동자가 필요한 것뿐이다.

그와 정반대 취지로 탈핵 운동은 기후 운동의 '정의로운 전환' 요구를 적용해야 한다. 정부에게 재생에너지에 획기적으로 투자하고, 핵발전소를 폐쇄하되 관련 산업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산업과 일자리 전환 과정에서 생계비·교육비를 충분히 지급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안전한 핵은 없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